"부안 격포항 발전 예산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격포·위도서 민생 탐방 "위도가 개발돼야 부안 전북 관광 개발 될 것"

민생 탐방을 위해 16일 부안 위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서해 훼리호 참사 위령탑을 찾아 관계자들과 참배를 하고 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첫 번째 일정으로 부안군 위도를 16일 찾았다.

이날 오전 격포항을 먼저 방문한 김 후보는 부안군 수협(조합장 송광복)에서 격포 어촌계장들을 비롯해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광복 조합장 등 어민 50여명이 함께 했으며, 김 후보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북도 수산업 발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격포 어촌 계장들은 "격포항은 굉장히 비좁고, 항만 기능시설이 미흡하다"며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안 대표어항인 격포항이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재부를 비롯해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격포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어업허가제 일원화, 곰소항 계절 어업허가 등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도를 찾은 김 후보는 바지락 생산 현장을 방문해 어민들을 격려하고, 어민과 함께 직접 바지락을 채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이동일 주민대표 등 10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위도 주민들은 "위도는 1970년대만 해도 1만여명의 주민들과 외지인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재는 1,200여명만 살고 있는 등 많이 쇠퇴해 있다"면서 "전북도에서 가장 큰 섬인 위도가 개발돼야 부안군과 전북도의 관광이 개발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후보는 "제가 위도를 찾은 이유는 아무리 먼 곳에 계시더라도 직접 발로 뛰며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며 "위도를 비롯해 서해안의 어종 자원 고갈문제에 깊이 생각하겠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위도 서해 훼리호 참사 위령탑' 참배를 끝으로 격포·위도 민생 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균형발전 도모"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진안 찾아 현안 청취 오후에 익산 공무원노조 정책건의서 전달 받아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16일 진안군청을 찾아 김창열 군수 권한대행과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3일 앞둔 16일 진안군청을 방문, 진안군 현안과 정책건의 사항을 듣는 등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 갔다.

진안군(군수권한대행 김창열 부군수)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없는 맞춤복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 재난대응 안전진안' 등 진안군의 '6대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진안군의 현안문제 등을 조 후보에게 건의했다.

조배숙 후보는 "전북의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더 낙후됐다. 도지사로 당선되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북동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리산과 진안·무주·장수 지역을 휴식·치유·체류형 관광벨트로 개발해 산림·생태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힘있는 여당 도지사' 후보를 꼭 당선 시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조 후보는 오후에 캠프를 방문한 익산시공무원노조 대표로부터 정책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성'

민주 양경숙 의원, 전주을 지역 광역 · 기초의원 후보들 대상 특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이 오는 6. 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오후 양 의원의 효자동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운동 전략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은 전주(을)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 선거운동 전략과 기법, 지방의원의 핵심 역할 등은 물론, 전북도·전주시의 예산·재정 현황,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 심의, 조례 입법과 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행정학 박사인 양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원 및 공무원,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분석 및 예·결산, 행정감사 관련 강의를 300여 회 이상 해온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당원 교육연수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개혁공천을 통해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한다"며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해 준비된 지역일꾼이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녹색당과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는 사회에 닥친 재난이자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할 '기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3개 진보정당, 기후 정치 필요 '한목소리'

정의당 도당 등 "기후위기, 사회에 닥친 재난 · 공동체 전체의 문제" 기후정의 조례 제정 촉구

전북지역 3개 진보정당이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 녹색당과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는 사회에 닥친 재난이자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할 '기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 위기의 해소가 기후 위기 시대의 책임 있는 기후정치"라며 주민이 체감할 정책과제 반영, 지역 공공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행·예산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기후정의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반영하고, 청소년과 농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를 포함하는 '기후정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협의체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북도의 정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尹 5 · 18정신 헌법 수록 약속, 지선 표심용 아니길"

민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이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아침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과거 전두환을 옹호했던 것을 보면 (역사)인식이 의심되고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5.18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방향성 자체가 안 보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어, "자유를 많이 언급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 시대처럼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며 "인권신장 방안, 권력 분산, 국민 의사 반영 시스템 등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국정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추경 농업예산 정부 총지출 대비 2.5% 수준으로 ↓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 농촌용수개발 등 4252억9700만원 감액 이원택 의원, 농어민 위한 추경 4690억원 증액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20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또,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유호상기자

선거질서 위반행위 공동대응 핫라인 구축

도 선관위, 전북경찰청과 업무협의회서 상호 공조 의견 모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13일 전북선관위 상황실에서 선거질서 위반행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선관위 지도과장, 조사담당관을 비롯해 전북경찰청 경비과장, 경비팀장 등 7명이 참석해 양 기관 간 단속활동 지원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및 투·개표소 소요·교란, 직원 및 선거사무관계자 폭행·협박, 투표지 훼손 및 사위투표 등 선거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갈수록 선관위 사무실, 투·개표소 등 선거관리시설에 대한 무단침입 등 소요·교란 행위가 늘어나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